내년 예산안 반영 광주·전남 사업 살펴보니

문화수도·호남 고속철 '탄력'

광산업에 438억…광주 주력산업 육성 기반 다져
SOC분야 2조4,008억…무안공항 내년 개항 기대

광주시와 전남도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액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큰 폭으로 반영됐다.

이에따라 광주~무안간 고속도로, 무안공항, 광주문화수도 사업 등 광주·전남의 주요 사업은 물론, 호남고속철도 기본설계 등 신규 SOC 사업 추진도 탄력을 받게됐다.

광주시는 광산업에 대한 지원(438억원)과 전자산업 육성에 대한 118억원의 국비가 배정됨에 따라 주력산업의 육성에 안정적인 기반을 갖추게 됐다.

특히 문화수도 조성사업의 핵심시설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에 656억원이 투입, 내년 말이면 옛 전남도청 일대에서 본격적인 전당 공사가 시작된다. 이와 함께 문화전당 콘텐츠 확보 및 홍보에 70억원, 문화산업기반 조성(창작스튜디오 등)에 39억원 등 문화수도 조성 사업에 총 760억원이 배정됐다.

광주와 외곽지역으로 연결되는 혼잡도로 개선과 관련한 사업도 본격화된다. 하남산단 외곽도로(평동~하남~첨단산단, 36억원)와 북부순환도로(도동고개~평동산단진입도로, 16억원)에 대한 설계 용역및 사업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무등산 정상의 주상절리대(입석대, 서석대) 조성사업에 30억원 배정이 확정적임에 따라 주상절리대 주변에 자연석이 깔리고, 목재 지지대를 설치되는 등 탐방로가 개설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광주 서구 화정동 옛 국정원이 청소년복합문화센터(9억원)로 탈바꿈하게 되며, 도심 5대 공원도시 숲 조성사업에도 25억원의 국비가 보태져 도심 속 공원이 대폭 확충되고, 광주천 자연환경 정화사업(40억원)도 차질없이 진행되게 됐다.

전남은 도로 등 SOC(사회간접자본)분야에 배정된 사업비가 2조4천8억원으로 총 예산 확보액의 절반이 넘는 50.3%를 차지했다.

이번 예산안에서는 그동안 개항 지연이 우려됐던 무안 국제공항과 관련, 공사 마무리에 필요한 예산 370억원이 전액 확보됨으로써 2007년 완공이 가능해지고 개항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무안공항의 정상적인 개항과 운영에 필수적인 광주~무안간 고속도로 역시 내년 완공을 위해 전남도가 확보해야 하는 872억원이 전액 반영됨으로써 무안공항이 개항과 동시에 호남권 거점공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또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와 관련, 여수~순천간 국도 17호선 개설비 700억원 등 모두 11개 사업에 6천288억원이 반영돼 내년에 실시될 예정인 BIE(세계박람회기구) 실사에 본격 대비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고흥 우주센터 건설사업비 412억원이 확보됨으로써 전남이 본격적인 우주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

목포~광양간, 전주~광양 간 등 고속도로 5개 노선 건설 사업비 4천272억원과 광양컨테이너부두, 목포신항 등 항만건설 사업비 4천24억원, 순천~여수 간 전라선 철도개량 등 철도 관련 5개 사업비 2천477억원도 확보됨으로써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해졌다.

신규사업으로는 마그네슘 사업화 지원시설 건립 25억원과 사상의학 체험랜드 조성 5억원, 남악신도시 선시티 건설 21억원, 한방산업진흥원 설립 10억원, 해양테마 펜션단지 조성 20억원 등 540억원이 반영됐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무안 국제공항 마무리 공사에 필요한 370억원의 국비요청액이 2007년 정부예산안에 전액 반영됨에 따라 무안 공항이 내년 완공은 물론 개항까지도 내다볼 수 있게 됐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내년 국세수입 어떻게 되나

월급쟁이는 '봉'?… 근소세 13%↑

내년 국민 1인당 세금(국세+지방세) 부담액이 383만원에 달해 올해보다 20만원 가량 늘어나고, 근로자 1인당 근로소득세 부담은 200만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재정경제부가 27일 발표한 2007년 국세세입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세수입은 148조 1천211억원으로 올해 예산상 국세수입 135조 3천336억원보다 9.6%, 국세수입 전망치 138조 272억원에 비해 7.3% 각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세에 지방세 수입까지 합친 조세부담률은 올해 20.7%에서 내년에는 20.6%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GDP 전망치 906조 2천808억원에서 조세부담률로 추정한 국세와 지방세(38조 2천102억원 추정)를 합친 조세 수입은 186조 3천313억원으로, 이를 내년 추계인구 4천869만 2천명으로 단순히 나누면 국민 1인당 세부담은 383만원에 달해 올해의 363만원보다 20만원 증가한다. 내년 예산상 국세수입만 놓고 보면 1인당 국세 부담액은 304만원으로 올해의 285만원에 비해 19만원 가량 늘어난다.

이와 함께 내년에도 월급쟁이들이 내는 근로소득세가 자영업자들이 내는 종합소득세보다 많이 걷히는 현상이 계속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실제 갑근세를 내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1인당 근소세는 올해 188만원에서 내년에는 206만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월급쟁이 세금 '껑충' 자영업자 '느릿느릿' =정부는 내년에 소득세 세수가 33조 126억원으로 올해 예상치인 29조 9천875억원에 비해 10%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중 월급쟁이들이 내는 근로소득세는 13조 7천764억원으로 올해 예상치인 12조 1천893억원에 비해 13% 증가하고, 자영업자들이 주로 내는 종합소득세는 5조 3천252억원으로 올해 예상치인 4조 7천608억원 보다 11.9%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양도세·종부세 세수 급증=정부는 양도소득세 세수가 올해 7조 524억원(예상치)에서 내년에는 7조 4천110억원으로 5.1%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 정부는 2006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올해 양도세 세수를 4조 7천529억원으로 잡았지만 지금은 이보다 2조 3천억원이나 많은 7조 524억원을 예상하고 있을 정도다.

이처럼 올해 양도세가 급증할 것으로 보는 근거는 부동산가격이 급등한 데다 2주택자와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실거래가 과세 확대와 실거래가 신고제 시행에 따른 과표현실화 등 때문이다. /박치경기자 unipark@kwangju.co.kr

지방선거 후유증-멍드는 지역사회

민선 4기 출범 3개월이 지난 현재, 단체장이 교체된 지역에서는 전임 단체장 정책 뒤집기가 부지기수로 진행중이다. 광주·전남 시·군·구 중 단체장이 교체된 지역은 광주 3군데, 전남 12군데. 광주·전남 27개 시·군·구의 절반을 훨씬 넘는다.

단체장 바뀌면 으레 "없던일"
인력·예산 낭비 비일비재

❶극심한 편가르기
❷뒤집히는 정책들
❸인사는 복마전
❹판결에 떠는 단체장들

새 단체장 입맛에 따라 전임 단체장이 추진해왔던 시책이 중단 또는 재검토됨에 따라 인력·예산 낭비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지역민들 사이에선 '원래 무리한 사업이었던 만큼 당연히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전임자와 차별화를 위해 기존 사업을 백지화하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을 무너뜨리고 예산을 낭비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주요정책 단체장 독단 추진

순천시는 전임 시장이 역점을 두어 추진했던 조례호수공원 조성사업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조례저수지와 인근 5만5천 평에 247억 원을 들여 오는 2010년까지 도심 속 호수공원을 만들기로 했지만 시의 빈약한 재정상황과 접근성, 활용성 등을 감안하면 거액을 투입할 가치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지난 1년여 동안의 행정력과 1억3천만 원에 달하는 설계용역비가 낭비됐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순천시는 또 순천만 어린이 교통공원과 뿌리깊은 나무 박물관, 순천 시민천문대 등 민선 3기부터 추진된 주요 사업들도 예산 집행의 타당성과 시민의 활용가치 등을 이유로 전면 재검토키로 했다.

곡성군은 전임 군수가 강력히 추진해온 '농어촌 복합 노인복지단지 조성사업'을 최근 백지화하고 사업권을 전남도에 반납했다. 오는 2008년까지 죽곡면 보성강변 일대 7만여 평의 부지에 노인전문복지단지를 조성한다는 내용의 이 사업은 민선 3기인 지난해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국비 35억 원까지 지원받았으며, 지난 6월 4억7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사업예정부지 일부도 매입했다.

하지만, 곡성군은 최근 577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사업비 충당이 쉽지 않고, 사업에 참여키로 한 한국농촌공사가 지난해 10월 투자의향을 전격 철회한데다 다른 민간투자자 접촉도 모두 실패로 끝나 '사업전망이 극도로 어두워졌다'며 이를 백지화했다.

구례군은 전임 군수 재임시 야생화 특구를 조성하고, 세계야생화엑스포를 개최한다는 계획을 추진해왔으나 민선 4기 들어 이들 사업에 지원해야 할 예산 부담이 지나치다는 이유로 곤충박람회를 개최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축소키로 했다. 또 토지면과 마산면에 각각 1개씩의 도정공장 설립 자금을 지원하려 했으나 역시 빈약한 재정을 문제삼아 보류시켰다.

고흥군도 전임 군수가 추진해왔던 '2007~2010년 지역사회복지계획'을 백지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계획은 앞으로 4년간 노인복지와 저소득층 복지에 1천900여억 원을 투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빈약한 재정여건상 국고 보조가 없이는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 고흥군의 분석이다.

'인기 위주' 행정이 문제

광주시 북구는 민선 2.3기 8년동안 계속해왔던 '자미축제'를 '인지도가 낮다'는 이유로 전격 취소했다. 이들 시·군·구 외에도 전임 단체장이 추진해오던 사업이 백지화되거나 재검토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건철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자체의 주요 정책과 사업이 대부분 단체장의 독단으로 추진되다 보니 단체장이 교체될 때마다 중단되거나 바뀌는 현상이 생긴다"며 "전임 단체장과의 차별화를 의식, 임기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는 '인기 위주'의 행정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